



(왼쪽부터)이범호 한국은행 비은행분석팀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이상형 부총재보, 이정숙 금융안정국장, 이대건 안정분석팀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 1 “韓 FSI·FVI 적신호… 채무상환 악화 등 리스크 대비해야”

〈금융불안지수·금융취약성지수〉

글로벌 인플레이 등 시장 변동성 ↑  
한계기업, 취약 자영업자 직격타  
“채무상환 지원정책 중요성 커져”

금융불안지수(FSI)가 금융시장가격 변수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3월 이후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대내외 리스크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속,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서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건전성과 복원력을 바탕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지만 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먼저

### 금융안정 취약성·리스크요인 정책대응 방안

취약성	정책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은 가계부채 수준</li> <li>기업의 불균등 회복</li> <li>높은 부동산 가격</li> <li>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금융불균형 누증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및 채무재조정</li> <li>·대출규제의 신중함 조정</li> <li>·경기대응완충자본(CCyB) 활용</li> </ul> </li> <li><b>금융기관의 복원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재점검</li> <li>·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li> </ul> </li> <li><b>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대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 강화</li> <li>·암호자산과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규제체계 마련</li> </ul> </li> </ul>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li> <li>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li> <li>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li> <li>중국 등 신흥국 불안 가능성</li> </ul>	

자료/한국은행

FSI는 지난 3월 8.9까지 오른 이후 ▲4월 10.4 ▲5월 13.0까지 확대되고 있다. 주의단계 임계치(8)보다 높은 수준이다. FVI도 가계부채 누증, 높은 주택가격 수준 등에 따라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서는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계부

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기업대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다.

자산시장에서는 주식·채권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주택가격도 기초경제여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익성도 은행을 중심으로 개선된 가운데, 복원력도 대체로 양호했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채권투자자금 유입규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 누증,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 취약성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누증된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자산가격 변동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늘리고 소비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불균등 회복(uneven recovery)으로 회복이 더딘 한계기업 및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등 신흥시장국 불안 가능성 등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라 국내의 정책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

정 및 취약차주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국 등 신흥국의 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의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채 누증 억제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 ▲새로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비 등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출규제 강도 및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의 단계적 조정과 유동성(liquidity)보다 채무상환(solvency) 중심의 금융지원정책 운용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 복원력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재점검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metroseoul.co.kr

## 2 주택대출 보유 차주, 대내외 충격에 더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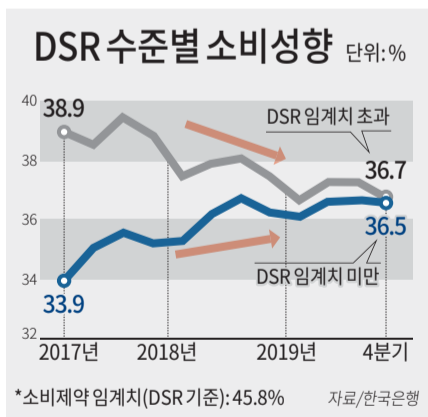
자산시장 연계 가계부채 급증  
소비임계 상회 고DSR 차주 ↑  
“주택 활용 신규대출 관리해야”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하며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자칫 되살아난 민간소비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상황(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및 주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 간 상관관계도 지난 2012~2019년 중 0.16에서 2020~2021년 중 0.86까지 확대됐다.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DSR)과 부채비율(LTI)이 여타 차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식 관련 대출 보유 가구의 채무상환부담 수준(2021년 기준, DSR 42.2%, LTI 241.8%)도 미보유 가구(D



SR 32.0%, LTI 200.8%)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대출의 존도가 높은 주택보유 차주의 DSR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는 차입가계의 소비 및 부실위험에도 변화를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부채증가는 소비를 늘리는데 기여하나 소득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늘면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 차주의 DSR이 상승할 경우 소비 임계수준을 상회하는 고DSR 차주가 늘어나면서다. 이 경우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며 소비성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DSR이 높았던 2016년 당시 DSR 수준이 소비제한 임계치(45.8%)를 상

회했던 차주는 2017년 이후 하락한 소비성향을 보였다. 반면 같은 임계치를 하회했던 차주의 소비성향은 증가했다.

특히 주택보유 차주는 거시경제충격(소득감소, 금리상승 등) 발생 시 소비제한 임계치 초과 차주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소비성향이 크게 하락했다.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서 살펴볼 때 자산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보유 차주를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한은은 “과도한 가계대출 자금의 자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DSR 등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구조 재편(리츠 활용 등) 등을 활용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신규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라며 “기존대출의 점진적인 축소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시적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3 자영업자 대출규모 1000兆 근접 “非은행기관 취급심사 강화 필요”

코로나 이전 대비 40.3%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 유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불균형 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상황(2022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다. 하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월 말 960조 7000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2019년 말) 대비 40.3% 증가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조치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폐업률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2021년 들어서는 부동산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기록했다.

시나리오분석을 통해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상환

비율(DSR) 변화를 점검해본 결과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은 올해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되면서다.

특히 DSR 상승 등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은 점이 문제다. 자영업자대출의 채무상환위험 증가 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solventy support)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지연 기자